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두 발언

2025. 10. 23. (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역 원

I.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자와 직원 분들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I. 정책서민금융의 경제·사회적 가치

정책서민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懷疑)를 갖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연체가 있으시거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왜 공적기관이 일부러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출은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주식, 펀드와 달리,
판매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철저한 ‘선별’을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모는 작고 건수는 많으며
차입자별 특성은 다양한 개인대출은
차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 위험도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합니다.

이때의 ‘평균적인 위험도’는
신용조회사(CB)나 자체적인 신용평가(CSS)가
미리 계산해 놓은 ‘등급별 예상부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러한 신용평가는 완벽하지도 않아서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로 상환능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받을 수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차입자는
불법사금융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Ⅲ. 채무조정 of 경제 · 사회적 가치

한편 채무감면, 즉 채무자의 빚을 깎아주는 것에 대한 호의적이지 못한 국민들의 감정은 어쩌면 정책서민금융보다도 골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오랜기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치고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우리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상환능력과 의지, 어려움은
작년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우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고,

그러지 못한 장기·복합적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사회가 체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IV. 마무리말씀

복잡하게 말씀 드렸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 여러분이 느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늘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